

“광주TP원장 후보자 부적격”…사상 최초 지명 철회 요구

자료제출 거부 인사청문회 파행 거듭

시의회 “도덕성 검증 불가…자격 미달

임명 강행시 혼란 책임은 姜시장 몫”

광주시의회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범모(59) 후보자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시의회가 부적격 의견과 함께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한 결과, 주요 검증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도덕성과 자질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인사청문특위는 최종 의견서에서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광주시장은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사청문특위는 “그럼에도 시장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향후 발생할 광주TP의 혼란과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주요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회를 거듭하며 파행을 빚었다.

인사청문특위가 요구한 자료는 ▲자녀의 초·중·고·대학 입학·전학·졸업 현황 ▲후보자와 배우자의 최근 5년 간 금융거래 현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내용·직업 변동 현황 등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라 제출이 곤란한 자료”라며 “배우자와 자녀 관련 자료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관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의 거듭된 자료 제출 요구에 김 후보자는 “위원님들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며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인사청문특위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도덕성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답변에서 공격 마인드를 찾아보기 어렵고 후보자의 경력을 살펴보다라든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또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는 TP가 위원회에 보고한 기존 업무보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결정은 과거 시의회 인사청문 과정을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인 조치다.

그동안 시의회 인사청문특위가 부적격 의견을 제출한 사례는 7대 의회에서 2015년 윤재만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 엄기욱 광주북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등 3명이다.

이들 후보자는 모두 인사청문특위의 부적격 결정 이후 사퇴했으며 집행부가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밖에도 인사청문 도중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경우는 2017년 박중배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2018년 정상용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2021년 정성배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 등 3명이다.

한편, 김범모 광주TP 원장 후보자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정당 사무처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한 정치권 출신 인사로 서울외국환중개전무이사과 광주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변은진 기자



산정 공공주택 민·관·공 협의체 출범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미래차산업 자율주행 삼각벨트 조성 본격화

광주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2년차

자율주행인증·연구개발·인력 양성 성과

내년 인증센터 완공…인프라 구축 속도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도약 기반 마련

광주시가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사업 2차 년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진곡산단-빛그린국가산단-미래차국가산단을 축으로 한 ‘자율주행 삼각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함께 17-18일 전북 변산 소노벨에서 ‘2025년 미래

차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참여 기관·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보고회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2차년도 주요 추진 성과가 발표됐다. 특히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인증지원센터’ 건립 상황이 공유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9월30일 착공한 인증지원센터는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4년 5층, 2025년 6층을 구축한 데 이어, 내년까지 총 21종의 자율주행 검증 장비를 구축해 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참여 기업들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 성과도 두드러진다.

‘에스오에스랩’은 윈드셸드 오염 및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인지가 가능한 엣지 임베디드 모듈을 개발했으며 ‘DH오로티드’는 노면 반력모

사 액추에이터와 안전성을 위한 이중화 전원시스템 등 핵심 구성요소를 개발했다.

광주산학융합원은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부품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특화 교육과 R&D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총 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예정이며 산·학·연 연계 현장형 심화 교육 등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은 “자율주행 인증지원센터 구축,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각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국정과제로 반영된 AI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역 기업들이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민주 “국힘, 5·18 왜곡 프레임 씌우기 중단해야”

광주시당, 시민 항의 불법시위 규정 비판

“장동혁 대표 참배는 정치적 연출” 지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8일 국민의힘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벌어진 광주시민의 항의를 ‘불법 시위’로 규정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6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 “국민의힘이 5·18민주묘지에서 정당한 항의를 표한 시민들에 대해 경찰의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을 향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말로만 국민을 내세우면서 정작 시민의 정당한 항의를 문제 삼는 모습은

국민의힘의 본색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5·18 정신을 왜곡하는 부당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비난했다.

광주시당은 또 “장동혁 대표의 5·18묘지 방문은 진정한 추념이라 보기 어려운 정치적 연출”이라며 “광주시민의 항의는 5·18의 역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시민적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동혁 대표의 5·18민주묘지 참배를 가로막는 ‘광주시민’을 가장한 일부 과격한 단체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기리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일 집회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위였다”고 비판한바 있다.

/변은진 기자

베를린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 개장

전남도는 18일 “독일 베를린의 모모고마트에 최근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모모고는 독일 현지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아시아 식품 온라인몰(momogo.de)을 비롯해 아마존, 틱톡샵 등 온라인 채널과 레베 등 오프라인 유통망을 동시에 확보한 주목받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상설판매장에는 완도 김, 보성 녹차, 고흥 유자차, 나주 배음료, 구례 나물류는 물론, 독일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파우치 음료와 곤약젤리까지 전남 40여개 업체의 우수 농수산물품 100여종이 입점했다.

개장식에는 천우승 주독일 한국대사관 참사관과 독일 최대 슈퍼마켓 체인 레베 구매 담당자,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이 참석

했다.

특히 자유대 학생들이 레베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럽에서 K-푸드가 사랑받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전남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베를린 상설판매장 개장으로 전남 우수 농수산물을 알릴 새로운 창구를 확보했다”며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전남의 맛’을 직접 경험하도록 현지 유통 채널을 적극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알고당시다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법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법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법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법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